



준칙주의에 의한 대학 설립의 실상

이무근 | 경일대학교 총장

I. 서언

우리나라 고등 교육 인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하여 왔다. 대학의 학생 수는 대학의 신설과 기존 대학의 학생 정원의 증원을 통하여 확대되어 왔다. 그 동안 대학의 설립인가와 관련된 법은 여러 번 개정되었다. 최근의 대학 설립 인가는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준칙주의에 근거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준칙주의에 의해 설립된 대부분의 대학들은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수월성 제고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최근 언론과 교육계 인사들 중에는 준칙주의에 의해 설립된 대학 때문에 대학의 정원이 늘어났고 대학의 부실도 초래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논하는 내용 중에는 사실과 다른 점이 상당히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당시 대학설립준칙제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학설립준칙안 제정에 관여한 입장에서 준칙주의에 의해 설립된 대학의 현황에 관한

정보를 관심 있는 분들과 공유하여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 글을 쓰게 되었다.

II. 대학설립준칙주의의 도입 배경

대학 설립 준칙주의는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에 대응하여 우리 교육을 세계적 수준으로 질적 도약을 꾀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교육규제 완화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 확정 발표된 1995년 5·31 교육개혁에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개혁안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유화 경쟁을 통한 교육의 수월성 제고와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강조하였다. 이것은 소규모 특성화된 대학을 전제하는 것이다.

즉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대학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따라 일정한 설립기준을 충족하면 다양한 소규모 특성화 대학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지난 1996년에 도입되어 1997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이다.

〈표 1〉 대학설치기준령과 준칙주의에 의한 대학설립 인가 주요 기준 비교

구분		대학설치 기준령	준칙주의에 의한 대학설립기준
1. 설치규모	총정원	대학 5,000명 개방대학 3,200명(주야간) 전문대학 1,280명	교사기준 : 학생정원 400명을 기준(대학원대학 100명) 교원기준 : 학생정원 200명을 기준(대학원대학 100명)
	설치 학과	대학 25과 개방대학 10과 전문대학 8과	최소설치학과 제한 없음
2. 시설·설비 확보기준	교지	대학 336,765㎡(101,871평) 개방대학 63,435㎡(19,189 평) 전문대학 85,000㎡(25,712 평)	400명 이하 : 교사건축면적 이상 400명 초과~1,000명 미만 : 교사기준면적 이상 1,000명 이상 :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 1. '학생정원'은 편제완성년도를 기준 2. '건축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2호의 건축면적(바닥면적)임
	교사	대학 112,255㎡(33,957평) 개방대학 30,207㎡(9,137평) 전문대학 19,700㎡(5,959평)	학생 1인당 교사 기준 인문·사회 : 12㎡ ; 자연과학 : 17㎡ 공학 : 20㎡ ; 예·체능 : 19㎡ 의학 : 20㎡ 전문대학은 교사 기준면적의 10분의 7에 해당
3. 재정규모	(교지별도 확보) 대 학 1,202억 원 개방대학 377억 원 전문대학 203억 원	교지·교사를 대학설립심사 전까지 100% 확보하고 기 준을 충족하여야 함	
4. 수익용 기본재산	학교운영경비의 10배	대학의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 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되, 재산총액의 3.5% 이상의 연간 소득이 있는 재산이어야 함	
5. 교원	대학설치기준령 제3조 적용 학과단위로 교원정원 책정	교원1인당 학생 수 인문·사회 : 25 ; 자연과학 : 20 공학 : 20 ; 예·체능 : 20 의학 : 8 대학원대학의 경우는 대학원생수를 2배로, 대학과 대학 원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대학원생수를 1.5배로 가중 하여 교원 수를 산출	
6. 실험실습설비 및 기자재	대학실험실습설비기준령에 따 라 확보하고 소요자금 명시	대학실험실습설비기준령을 폐지하고, 교육기본시설, 지 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을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대학 현장에 명시하도록 함	

* 자료 : 1) 대학설립준칙제정위원회(1995). 대학설립준칙안 제정 및 설립 제도 개선 방안 연구. pp. 19 - 24.
2) 교육법전 편찬회편(2004). 교육법전 :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동시행규칙. 교학사. pp. 1228 - 1233.

“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대학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따라
일정한 설립기준을 충족하면 다양한 소규모 특성화 대학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구제도의 비현실적 인가 기준과
그 적용 과정상의 사회적 물의를 고려하여 그 개선책으로 강구된 것이다.
신제도는 소규모 특성화 대학을 지향하여
그 결과 다양한 규모의 소규모 대학 설립을 촉진하였다.

”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은 설립 기준을 구체화
명료화하여 인가 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판단을 소비
자인 학생, 학부모, 기업 및 일반 국민에게 맡
겨 시장원리에 의한 대학간 경쟁을 유도하고,
정치적 판단에 의하여 대학 설립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막고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당시나 지금
이나 다수가 공감하는 바라고 생각한다.(교육
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
혁 방안], 1995. 5. 31. 제2차 대통령보고서
및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3)], 1996. 8. 20. 제4차 대
통령보고서 참조)

한편 1997년 이전의 대학설치기준령에 의
해 대학을 신설하려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총 정원
5,000명, 재정규모 1,202억 원(교지금액 제
외) ; 개방대학은 총 정원 3,200명, 재정규모
377억(교지 제외) ;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총
정원 1,280명, 재정규모 203억 원(교지 제
외)이 요구되는 막대한 물적·인적자원을 필
요로 하는 백화점식 종합대학(교)의 성격을

띠 대학을 설립하여야만 하였다.

그런데 '93 고등교육기관 신설 타당성 조사
연구'에 의하면 위와 같은 대규모 종합대학교
나 전문대학의 설립은 더 이상 설립이 필요 없
을 정도로 전국 곳곳에 고등교육기관들이 설
립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이후 수년 간은 특
정지역에 대해서 대학설립신청을 제한하는 대
학설립예고제를 도입하기도 하였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2000년대 초가 되면 대학 진
학 희망자와 학생 정원의 역전 현상이 예견되
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백화점식 대
규모 종합대학 보다는 다양한 소규모 특성화 대
학의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
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는 이러한 구제도의 비현
실적 인가 기준과 그 적용 과정상의 사회적 물
의를 고려하여 그 개선책으로 강구된 것이다.
신제도는 소규모 특성화 대학을 지향하여 대
학은 총정원 400명, 단설대학원은 100명을
최소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이하라도 무방하
며 설치 학과 수도 하한선을 두지 않도록 되어
있어 그 결과 다양한 규모의 소규모 대학 설립
을 촉진하였다.

소위 준칙주의에 의한 대학 설립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종전 대학설치기준령의 인가주의 하에서는 대학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입학 정원 50명 미만의 소인수 소규모 대학들이 설립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편 신제도 하에서는 대규모 종합대학의 신설은 기준 충족에 엄청난 투입을 요하기 때문에 실현이 쉽지 않게 되었다. 이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설립의 자유를 존중하고 사회·경제적으로나 국가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특성화된 대학의 설립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으면서 양적 팽창을 현실적으로 제어하는 방책이 도입된 것이다.

그렇다면 1997년에 새롭게 도입된 대학 설립의 신제도는 과연 그러한 장치라 할 수 있는가? 그렇다. 보다 구체적인 증거는 다음에서 자세히 제시하겠지만 우선 신제도가 발효된 1997년 이래 입학정원 200명을 초과하는 4년제 대학이 신설된 예가 없다.

만약 대학설립준칙주의 대신에 과거의 대학 설치기준령이 지금까지 존속되어 총 정원 5,000명 이상 되는 백화점식 종합대학교를 비롯하여 대규모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매년 몇 개씩 신설되었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하면 끔찍하다.

Ⅲ.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해 설립된 대학 현황

1997년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1996.7.26.공포)에 의해 현재까지 설립된 대학 현황을 보면 대학 37개, 전문대학 18개, 계 55개의 대학(〈표 2, 3, 4〉참고)와 28개의 대학원대학(〈표 5〉참고)이 설립되었다.

55개 대학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순수하게 준칙주의에 의해 신설된 대학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55개 신설된 대학 중 순수신설은 22개교(대학 16, 전문대학 6)이고, 21개교는 각종학교,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이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개편(4년제 각종학교 → 대학 11개, 전문대학 대학 6개, 2년제 각종학교 → 전문대학 2개)된 것이다. 또 국립대학이 7개교 신설되었고, 나머지 5개교는 1996년 이전에 추진되던 대학 등이 최종 인가된 대학들이다.

1997년 이래 신제도 시행 8년간 이미 설립 운영되고 있던 기존 대학들의 입학 정원은 1996년 말 500,029명에서 2004년 현재 574,334명으로 74,044명이 늘어나 무려 14.8%가 증가되었다. 대학 입학 정원 중 순수 대학 신설로 증가 인원은 8,735명으로 전체 증가 인원의 1.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기존 대학들이 차지하고 있다(〈표 2〉참고). 따라서 대학의 정원이 늘어나게 된 원인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설립 대학의 개수에 현혹되지 말고 한국의 대학들이 보유한 학생 정원의 분포와 양을 냉철히 분석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2〉의 내용이 사실일진데, 그렇다면 현안의 문제는 준칙주의에 의해 설립된 신설 대학이 아니라 기존 대학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입학 정원의 팽창의 주된 원인은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상의 내용을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으로 구분하여 좀 더 세분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간 4년제 대학은 37개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순수하게 신설된 것은 16개교로 그로 인한 입학 정원의 증원은 3,883

〈표 2〉 준칙주의 설립 대학 입학정원 추이 분석 총괄 (대학+전문대학)

구분		1996년도		2004년도			'96대비 증가인원	증가율
		학교수	정원	학교수	정원	%		
신 설	국·공립	-	-	7	3,670	0.6	3,670	0.7
	'96이전 추진실적	-	-	5	6,647	1.1	6,647	1.3
	개편	(21)	(14,610)	21	11,577	1.9	11,577	2.3
	순수신설(준칙주의)	-	-	22	8,735	1.5	8,735	1.8
	계(A)	(21)	(14,610)	55	30,629	5.1	30,629	6.1
기존대학(B)		286	500,029	274	574,334	94.9	74,044	14.8
합계(A+B)		286	500,029	329	604,963	100.0	104,673	20.9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표 3〉 준칙주의에 의해 설립된 대학의 정원 추이

구분		1996년도		2004년도			'96대비 증가인원	증가율
		학교수	정원	학교수	정원	%		
신 설	'96이전 추진실적	-	-	1	1,100	0.3	1,100	0.4
	순수신설(준칙주의)	-	-	16	3,883	1.2	3,883	1.4
	개편신설	(20)	(13,810)	20	10,787	3.3	10,787	4.1
	계(A)	(20)	(13,810)	37	15,770	4.8	15,770	5.9
기존대학(B)		134	500,029	134	311,970	95.2	45,955	17.3
합계(A+B)		134	500,29	171	327,740	100.0	61,725	23.2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표 4〉 준칙주의에 의해 설립된 전문대학의 정원 추이

구분		1996년도		2004년도			'96대비 증가인원	증가율
		학교수	정원	학교수	정원	%		
신 설	국·공립	-	-	7	3,670	1.3	3,670	1.5
	'96이전 추진실적	-	-	4	5,547	2.0	5,547	2.4
	개편신설	(1)	(800)	1	790	0.3	790	0.3
	순수신설(준칙주의)	-	-	6	4,852	1.8	4,852	2.2
	계(A)	(1)	(800)	18	14,858	5.4	14,858	6.3
기존대학(B)		152	234,275	140	262,364	94.6	28,088	12.0
합계(A+B)		152	234,275	158	277,223	100.0	42,848	18.3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명으로 전체 정원의 1.2%에 불과하다(〈표 3〉참고). 그리고 이들 신설 대학 등은 대부분 소규모 특성화 대학이다.

20개교는 산업대학, 전문대학과 각종학교들이 4년제 대학으로 개편된 것으로 동 대학들의 정원은 1996년도에 13,810명이었던 것이 현재는 10,787명으로 오히려 3,023명이 감소하였다. 이는 개편 대학들이 준칙주의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학생 정원을 감축하였기 때문이다. 1개교는 1996년 이전에 이미 대학 설립을 추진하여 1997년도에 개교하였다(〈표 3〉참고).

전문대학은 18개가 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순수하게 신설된 대학은 6개교에 불과하다. 신설 전문대학 중 국·공립은 7개교 3,670명이 증원되었으며, 사립은 11개교 11,189명이 증원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중 대학설립준칙주의 이전부터 전문대학 설립을 추진해 온 전문대학이 4개인데 동 전문대학의 증원분 5,547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순수신설 6개교, 개편신설 1개교 계 7개교 5,642명(전체정원의 2.0%)이 준칙주의에 의하여 증원된 것이다(〈표 4〉참고).

한편 1997년에 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대학원대학 현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28개 대학원대학이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신설되었는데 설립당시 입학 정원은 석사 1,402명, 박사 90명이었고, 전문대학원 24개, 특수대학원 4개였으며, 전공분야는 신학 17, 국제 3, 정보통신 3, 산업디자인 1, 외국어 2, 스포츠 1, 기타 1 이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 정원이 늘어난 주된 원인은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1997년도부터 일정한 교육여건을 갖춘 대학은 정원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대학정원자율화 정책의 도입으로 기존의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대폭 증원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정원자율화 정책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에 책임도 있지만, 대학 정원의 책정은 각 대학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자율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결국 대학 정원 자율화 정책에 따라 기존의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대학 정원 증원 문제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Ⅳ. 준칙주의에 설립된 대학과 기존 대학과의 비교

준칙주의에 의하여 설립되는 대학은 대학설립운영규정상 교육여건을 완비되었는지 등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현지 실사와 서류 심

〈표 5〉 대학원대학 설립 현황(1996~2004)

(2004. 4. 1 기준)

대학원수	위치	입학정원	대학원 종류	전공분야
28	서울 15, 경기 9, 대전 1, 인천 1, 충남 1, 전북 1	석사 1,648 박사 90	전문대학원 24 특수대학원 4	신학 17, 국제 3, 정보통신 3, 디자인 1, 외국어 2, 스포츠 1, 기타 1

〈표 6〉 준칙주의 설립대학과 기존 대학과의 교육여건 비교 분석(대학교)

구분		교지확보율	교사확보율 확보율	교원확보율	수익용 재산	비고
신설	'96이전 추진 신설(1교)	1,983.6	75.3	67.3	187.1	
	준칙주의에 의거 신설(16교)	873	153.9	195.3	131.2	
	개편신설 (20교)	270.5	146.0	92.8	93.4	
	신설 평균	467.4	143.7	118.6	106.8	
전국 평균		225.7	96.9	71.5	45.8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표 7〉 준칙주의 설립대학과 기존 전문대학과 교육 여건 비교 분석(국·공립 7개교 제외)

구분		교지확보율	교사확보율 확보율	교원확보율	수익용 재산	비고
신설	'96이전 추진 신설(4교)	110.6	137.2	83.9	33.2	
	준칙주의에 의거 신설(6교)	477	131.3	94.8	90.1	
	개편신설 (1교)	266.9	159.0	108.9	113.0	
	신설 평균	812.1	136.7	89.2	67.7	
전국		237.5	136.1	74.5	39.6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사 등을 거쳐 엄격하게 심의하고 있으므로 부실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없었다.

흔히 준칙주의 때문에 부실대학이 생겼다고 주장하지만 준칙주의에 의해 설립된 대학의 교육 여건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대학의 경우 1997년 이후 신설된 37개 대학의 교지확보율 467%, 교사확보율 144%, 교원확보율 119% 및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107%인데 비해 전국 사립대학의 평균은 교지 226%, 교사 97%, 교원 72%, 수익용 기본재산 46%로 기존 대학들보다 준칙주의로 신설된 대학의 여건이 훨씬 좋게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1997년 이후 신설된 11

개 대학의 교지확보율 812%, 교사확보율 137%, 교원확보율 89% 및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68%인데 비해 전국 사립 전문대학의 평균은 교지 274%, 교사 136%, 교원 75%, 수익용 기본재산 40%로 기존 대학들보다 여건이 좋다(〈표 7〉 참고).

V. 결론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대학설립 기본 요건의 관점에서 볼 때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교원 등 대학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들에 대해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대학의 부실화를 막고 대학 교육의 내실화에 크게 기

“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대학설립 기본 요건의 관점에서 볼 때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교원 등 대학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들에 대해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대학의 부실화를 막고
대학 교육의 내실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대학정원이 늘어난 것은 준칙주의에 의해 설립된 대학들 때문이 아니라
기존 대학들이 정원 자율화 정책에 의해 학생정원을 너무 많이 늘렸기 때문이다.

”

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대학정원이 늘어난 것은 준칙주의에 의해 설립된 대학들 때문이 아니라 기존 대학들이 정원 자율화 정책에 의해 학생정원을 너무 많이 늘렸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대학정원 과다 현상을 제대로 막고 기존 대학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준칙주의 도입 전 설립된 기존 대학들이 학생 정원을 증원하고자 할 경우에도 대학설립준칙주의의 기본 요건 중 교원에 적용된 교수 대 학생 비율(인문: 1:25, 자연·공학·예체능: 1:20, 의학: 1:8)을 적용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기존 대학과 준칙주의에 의해 신설되는 대학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당시 신제도를 도입하면서 규제 장치를 마련하였었다. 1995년 12월 대학설립준칙제정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기존대학도 정원을 늘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준칙상의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이러한 규제 장치가 살아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역전 상황, 대학의 위기는 연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대학 설립 준칙주의에 의한 대학설립 운영 규정이 그동안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간 시행 중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학설립제도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진과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근거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의 사항(학교 설립의 목적, 학칙, 실험실습설비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등) 등 정성적인 분야의 주요사항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대학설립 운영규정도 개정(2004.3.5. 공포)하였다. 또한 학교법인설립 허가 단계에서 법인설립 신청서에 대한 심사 기능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맡아 학교법인 허가 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하는 등 그동안의 문제점을 상당히 보완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대학설립을 까다롭게 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칫 기존 대학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악용되거나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폐교되어야 할 대학은 당연히 폐교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진입 규제 덕에 계속 존속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체 대학의 경

쟁력을 저하시키는 꼴이 될 뿐이다. 경쟁력 있는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구조 조정을 하지 않으면 존립하기 어려운 그런 경쟁 환경이 돼야 한다는 것이 신념이다.

또한 현재 대학들이 처한 상황이 진입 측면의 문제라고만 하기도 어렵다. 대학의 퇴로가 봉쇄됐던 탓도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학도 자유롭게 구조 조정이나 인수 합병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공급과 수요가 지체나 차질 없이 균형을 잡아 가는 기제가 작동하도록 거시적 장기적 관점에서 인내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행 대학 설립 제도가 완벽한 것일 수 없으며 그것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하겠다. 어느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그러하듯 지속적인 개선이 관건인 것이다.

끝으로 준칙주의 때문에 부실대학을 양상했다든가 대학 정원 증원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재론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언론계를 위시한 우리 모두가 정부 정책에 건설적인 비판에 적극 참여하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발전적인 제안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였으면 한다. 

참고 문헌

- 교육개혁위원회(1995).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제2차 대통령보고서
- 교육개혁위원회(1996).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3). 제4차 대통령보고서
- 김신복, 박성호, 이무근, 이정식(1993). 고등교육기관 신설 타당성 연구.
- 대학설립준칙제정위원회(1995). 대학설립준칙안 제정 및 설립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이무근 외 6인(2003). 대학설립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이무근

서울대학교와 동 교육대학원(실업교원전공)을 졸업하고, 일리노이대학교에서 교육학박사(직업·기술교육전공)를 취득하였다.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교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경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직업교육학회 회장, 한국고등교육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위원 및 교육개혁심의회 전문위원, 대학설립준칙제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이다.

